

# 청렴윤리경영 브리프스

9월 | 공급망 관리와 윤리경영

2026 September | vol.165

## Brief

|   |                                                                                                                                  |
|---|----------------------------------------------------------------------------------------------------------------------------------|
| 1 | ILO는 일본 전기·전자업계의 SPP 사례를 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대등한 대화와 교육·전문가 지원이 공급망 인권관리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음을 제시                                           |
| 2 | 공급망 실사는 인권·노동 위험뿐 아니라 담당자의 금품수수·이해충돌을 함께 관리하고, 협력사의 부담 완화와 개선 지원을 중심으로 운영 필요                                                     |
| 3 | (사례) 미국 농산물 공급망 기업 Scoular, 통관중개인을 통한 멕시코 공무원 뇌물 사건으로 1,000만 달러 합의 후 제3자 심사·승인, 계약상 반부패 조항, 고위험 거래 통제와 준법 조직 재편으로 공급망 부패위험 관리 강화 |
| 4 | 권익위, 청탁금지법 시행 10주년을 맞아 제도 성과와 개선 방향을 논의하고, '공익신고 장려기금' 신설 및 신고자 보상 예산 확대로 신고자 지원 강화                                              |
| 5 | 정부, 공공계약 비리·보조금 부정수급·전관유착 등을 중점 반부패 과제로 설정하고 AI 기반 부패 적발 등 관리체계 강화                                                               |
| 6 |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500만 달러 이하 내부고발 포상금에 원칙적으로 30% 포상률을 적용해 신고 활성화와 제도의 투명성·예측 가능성 강화                                            |

# 목차

|            |                                                                                                                                                                                                                                                                                                                                             |        |                                                                                                                              |        |                                                                                                                          |
|------------|---------------------------------------------------------------------------------------------------------------------------------------------------------------------------------------------------------------------------------------------------------------------------------------------------------------------------------------------|--------|------------------------------------------------------------------------------------------------------------------------------|--------|--------------------------------------------------------------------------------------------------------------------------|
|            | 협력사와 함께 만드는 지속가능한 공급망                                                                                                                                                                                                                                                                                                                       |        |                                                                                                                              |        |                                                                                                                          |
| 1 윤리 체크리스트 | ILO, Sustainable Procurement Partnership: An Industry-wide Initiative and Case Studies of SMEs on Responsible Business Conduct(2026)                                                                                                                                                                                                        |        |                                                                                                                              |        |                                                                                                                          |
| 2 사례 돋보기   | 공급망 제 3 자 부패위험 대응<br>Scoular                                                                                                                                                                                                                                                                                                                |        |                                                                                                                              |        |                                                                                                                          |
| 3 윤리, 지금   | <table><tr><td>권익위 동향</td><td>2030 청년세대가 바라본 우리 사회 공정성 조사<br/>1,300 억 원 규모 모듈러교실 입찰담합 적발<br/>청탁금지법 시행 10 주년 토론회 개최<br/>예산 및 기금안 1,862 억 원 편성...“공익신고 장려기금 신설”</td></tr><tr><td>국내외 동향</td><td>정부, 첫 반부패정책협의회 개최<br/>미국 CFTC, 내부고발 포상금 지급기준 개정<br/>개인정보 대규모 유출 시 매출액 최대 10% 과징금<br/>한국-OECD, 공공기관 국제정책포럼 개최...ESG·AI 활용 논의</td></tr></table> | 권익위 동향 | 2030 청년세대가 바라본 우리 사회 공정성 조사<br>1,300 억 원 규모 모듈러교실 입찰담합 적발<br>청탁금지법 시행 10 주년 토론회 개최<br>예산 및 기금안 1,862 억 원 편성...“공익신고 장려기금 신설” | 국내외 동향 | 정부, 첫 반부패정책협의회 개최<br>미국 CFTC, 내부고발 포상금 지급기준 개정<br>개인정보 대규모 유출 시 매출액 최대 10% 과징금<br>한국-OECD, 공공기관 국제정책포럼 개최...ESG·AI 활용 논의 |
| 권익위 동향     | 2030 청년세대가 바라본 우리 사회 공정성 조사<br>1,300 억 원 규모 모듈러교실 입찰담합 적발<br>청탁금지법 시행 10 주년 토론회 개최<br>예산 및 기금안 1,862 억 원 편성...“공익신고 장려기금 신설”                                                                                                                                                                                                                |        |                                                                                                                              |        |                                                                                                                          |
| 국내외 동향     | 정부, 첫 반부패정책협의회 개최<br>미국 CFTC, 내부고발 포상금 지급기준 개정<br>개인정보 대규모 유출 시 매출액 최대 10% 과징금<br>한국-OECD, 공공기관 국제정책포럼 개최...ESG·AI 활용 논의                                                                                                                                                                                                                    |        |                                                                                                                              |        |                                                                                                                          |
| 4 윤리 네컷    | 통관에서 제품이 멈춰있어요                                                                                                                                                                                                                                                                                                                              |        |                                                                                                                              |        |                                                                                                                          |
| 5 행사       |                                                                                                                                                                                                                                                                                                                                             |        |                                                                                                                              |        |                                                                                                                          |

# 협력사와 함께 만드는 지속가능한 공급망



ILO, Sustainable Procurement Partnership: An Industry-wide Initiative and Case Studies of SMEs on Responsible Business Conduct(2026)

- ILO 는 일본 전자전자업계의 ‘지속가능조달 파트너십(SPP)’을 통해 대기업과 중소 협력사가 함께 인권정책을 수립하고 위험을 식별한 사례 소개
- 업계 공동의 경영진 교육, 실무 워크숍 및 전문가 상담은 협력사의 반복적인 자료 대응 부담을 줄이고 실질적인 개선을 지원
- 공급망 실사 과정에서는 인권·노동 위험과 함께 담당자의 금품수수·이해충돌을 관리하고, 자료 요구의 필요성과 비례성 점검 필요



## 협력사와 함께 만드는 지속가능한 공급망

국제노동기구(ILO)는 보고서 Sustainable Procurement Partnership: An Industry-wide Initiative and Case Studies of SMEs on Responsible Business Conduct(2026)를 통해 일본 전기·전자산업의 지속가능조달 파트너십(SPP) 운영 방식과 중소기업의 책임 있는 기업행동 사례를 소개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기·전자산업은 공급망이 복잡해 개별 대기업이 모든 협력사의 인권·노동 위험을 파악하기 어렵고, 중소기업도 인력과 전문성이 부족해 고객사의 인권 관련 설문이나 분쟁광물 조사를 실제 경영활동과 연결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SPP는 일본전자정보기술산업협회(JEITA)가 주도하고 ILO 일본사무소와 일본 전국사회보험노무사연합회가 협력한 산업 공동 플랫폼이다. 대기업의 일반적인 자료 요구를 넘어 경영진 학습회, 실무자 워크숍, 전문가 상담 및 사례 공유를 통해 중소기업이 자사에 맞는 인권정책과 관리체계를 마련하도록 지원한다. 보고서는 데이터서비스, 마쓰시로산업, 닛코전기통신, 시코쿠도장공업 등 4개 중소기업의 사례를 다루며, 그중 2개 기업의 사례는 다음과 같다.

마쓰시로산업은 부서별 직원들이 괴롭힘, 산업안전보건, 공장 소음으로 인한 지역사회 영향 등의 위험을 식별하고, 소그룹 대화를 통해 인권정책을 수립했다. 또한 15년간 운영해 온 '개선제안제도'를 직원의 의견과 인권 위험을 파악하는 수단으로 활용했다. 전담위원회가 제안을 매월 검토하고 반영 결과를 공개하면서 연간 제안 건수는 초기 약 100건에서 약 3,200건으로 증가했으며, 차별·괴롭힘 상담창구 운영은 직원 이직 감소에도 기여했다. 아울러 인권정책을 기존 경영시스템과 안전보건 활동에 반영하고, 원재료 조달 과정의 분쟁·인권침해 위험도 함께 점검했다.

닛코전기통신은 인권경영이 청년 인재 확보와 대기업 거래에서 중요한 경쟁요소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관리직부터 입사 2년 차 직원까지 참여하는 부서 횡단형 '기업과 인권팀'을 구성했다. 자사의 특성을 반영한 인권정책을 대내외에 공개하고 휴대용 인권카드 배포와 교육을 실시한 결과, 인권이 직원들의 일상적인 대화에 등장하고 담당팀 외 직원도 자신의 역할을 고민하는 등 인식과 행동의 변화가 나타났다. 기존 SDG 팀과의 협업도 확대됐으며, 조직문화와 청년 인재 유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회사는 현재 협력사 설문을 개발하는 등 해외 협력사를 포함한 공급망 인권실사를 준비하고 있다.

이들 사례는 공급망 윤리경영이 협력사에 대한 일방적인 평가나 자료 요구가 아니라, 구성원의 참여와 기존 제도의 연계, 지속적인 대화와 개선 지원을 통해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오른쪽 체크리스트는 이러한 ILO 보고서의 협력적 접근을 바탕으로 OECD '다국적기업 책임경영 가이드라인(2023)'의 위험 기반 실사, 이해충돌·반부패 관리, 계약을 통한 책임경영 및 고충처리 원칙을 반영해 구성했다.

### <협력사 선정·실사 청렴관리 체크리스트>

| 구분     | 실천 과제                                                                                          | ✓                        |
|--------|------------------------------------------------------------------------------------------------|--------------------------|
| 공동 식별  | 일방적인 설문·평가에 그치지 않고, 워크숍·면담 등 양방향 소통을 통해 협력사와 인권·노동·환경·부패 위험 및 개선 필요사항을 파악하는가?                  | <input type="checkbox"/> |
| 부담 완화  | 협력사에 요구하는 자료와 평가항목을 기업 규모와 위험 수준에 맞게 설정하고, 공동 양식·교육·전문가 상담 등을 통해 중소 협력사의 대응 부담을 줄이는가?          | <input type="checkbox"/> |
| 선정 기준  | 협력사 선정·평가 기준과 책임경영 관련 요구사항을 문서화하고, 평가자의 이해충돌을 신고·관리하는 절차를 두고 있는가?                              | <input type="checkbox"/> |
| 담당자 청렴 | 실사·평가 담당자의 부당한 금전적·비금전적 이익 수수를 금지하고, 반부패 정책과 내부통제에 관한 정기 교육을 실시하는가?                            | <input type="checkbox"/> |
| 계약 지원  | 계약 및 사전자격요건 등에 인권·반부패 등 책임경영 원칙을 반영하고, 문제가 발견되면 즉시 거래를 중단하기보다 개선 요구·교육·역량 지원을 우선하는 절차를 두고 있는가? | <input type="checkbox"/> |
| 점검·신고  | 협력사와 이해관계자가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신고·고충처리 채널을 운영하고, 실사 조치의 이행 결과와 개선 여부를 지속적으로 추적하는가?                  | <input type="checkbox"/> |

[출처 ILO, Sustainable Procurement Partnership: An Industry-wide Initiative and Case Studies of SMEs on Responsible Business Conduct(2026), pp. 10-13; OECD, OECD Guidelines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 on Responsible Business Conduct(2023), Chapter II, paras. 13-15, 19, 23, 25-28, Chapter IV, para. 51 및 Chapter VII, paras. 1-6을 바탕으로 재구성.]

### 참고

[ILO, Sustainable Procurement Partnership: An Industry-wide Initiative and Case Studies of SMEs on Responsible Business Conduct\(2026\)](#)  
[OECD, OECD Guidelines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 on Responsible Business Conduct\(2023\)](#)

# 공급망 제 3 자 부패위험 대응

사례기업: Scoular

핵심 키워드: #제3자관리 #통관중개인 #반부패절차 강화

- (거버넌스) 외부 컴플라이언스 성숙도 및 반부패 위험평가 결과를 반영해 준법 기능을 재편하고, 고위 경영진의 감독과 사업부문의 참여를 강화
- (프로세스) 문제가 된 통관 중개인의 이용을 중단하고, 위험 기반 제3자 심사·승인, 계약상 반부패·감사권 조항, 고위험 거래 재무통제 및 소프트웨어 연계 모니터링을 강화
- (프로그램) 행동강령과 반부패·뇌물방지·이해충돌·제 3 자 관리 정책을 정비하고, 관련 임직원을 대상으로 일반 및 맞춤형 반부패 교육을 실시



# Scoular

스쿨러(Scoular, The Scoular Company)는 130년 이상 운영되고 있는 미국의 글로벌 농업곡물 공급망 기업으로, 세계 80여 개국에서 농산물과 식품·사료 원료의 유통·수송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2026년 7월 미국 법무부(DOJ) 발표에 따르면, 스쿨러는 멕시코 농산물 수입 통관 과정에서 통관 중개인을 통해 현지 공무원들에게 40만 달러(약 5억 5,500만 원) 이상의 뇌물을 제공한 행위와 관련해 해외부패방지법(FCPA) 위반 조사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일부 지급금은 회사 장부에 화물 재검사 수수료(cargo reinspection fees) 등으로 기록됐다.

스쿨러는 미 법무부와 3년간의 기소유예합의(DPA)를 체결하고 벌금 및 몰수금을 포함해 총 1,000만 달러(약 139억 원) 이상을 납부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사건에서는 해외 통관 업무를 수행하는 제3자를 통해 부적절한 지급이 이루어지고, 해당 비용이 회사 장부에 정상적인 통관 관련 비용으로 기록된 사실이 확인됐다.

DOJ에 따르면 스쿨러는 사건 이후 외부 전문기관을 통해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성숙도 평가(compliance program maturity assessment)와 반부패 위험평가(anti-corruption risk assessment)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 컴플라이언스 기능을 재편했다. 또한 고위 경영진이 컴플라이언스와 사업활동 전반을 감독하도록 하고, 사업부문과의 소통과 참여를 확대하는 등 조직 차원의 개선조치를 실시했다.

특히 사건이 발생한 제3자 통관 업무와 관련해서는 재검사 수수료와 연계된 멕시코 통관 중개인의 이용을 중단했다. 제3자 관리 절차도 강화했다. 제3자 서비스 제공업체에 대한 위험 기반 심사와 승인 요건을 개선·시행하고, 제3자 계약에는 반부패 및 감사권(audit rights) 조항을 반영했다. 아울러 고위험 거래에 대한 재무통제 절차를 개정하고, 위험 기반 검토·모니터링 절차를 강화하는 한편 특정 소프트웨어 도구를 활용해 관련 업무를 연계했다.

이와 함께 스쿨러는 행동강령(Code of Conduct)을 개정·시행하고 반부패·뇌물방지, 이해충돌, 제3자 관리와 관련된 주요 정책과 절차를 정비했으며, 관련 임직원을 대상으로 일반 및 맞춤형 반부패 교육을 실시했다. 스쿨러의 FY25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는 최고법률책임자(Chief Legal Officer)가 컴플라이언스·윤리 프로그램을 총괄하는 거버넌스 체계도 제시돼 있다.

## <DOJ가 공개한 Scoular의 주요 개선조치>

| 구분               | DOJ 발표 내용                                                                                        |
|------------------|--------------------------------------------------------------------------------------------------|
| 1. 조직 내 준법 인식 강화 | 사업부문과의 소통·참여를 확대해 조직 전반의 컴플라이언스 인식(compliance sensitivity)을 강화                                   |
| 2. 외부 평가 및 조직 개편 | 외부기관의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성숙도 평가 및 반부패 위험평가 결과를 이행하고, 컴플라이언스 조직을 개편하는 한편 컴플라이언스와 사업활동 전반에 고위 경영진의 감독을 반영 |
| 3. 통관 관련 운영위험 축소 | 멕시코에서 재검사 수수료와 관련된 통관 중개인의 이용을 중단                                                                |
| 4. 위험 기반 모니터링 강화 | 위험 기반 검토·모니터링 절차를 강화하고, 특정 소프트웨어 도구를 활용해 관련 업무를 연계·운영                                            |
| 5. 행동강령·정책 개정    | 행동강령(Code of Conduct)을 개정·시행하고 반부패, 뇌물방지, 이해충돌, 제 3 자 관리 등 컴플라이언스 관련 주요 정책·절차를 정비                |
| 6. 제 3 자 관리 강화   | 제 3 자 서비스 제공업체에 대한 위험 기반 심사 및 승인 요건을 개선·시행하고, 제 3 자 계약에 반부패 및 감사권(audit rights) 조항을 반영           |
| 7. 재무통제 개선       | 고위험 거래와 관련된 재무통제 절차를 개정·시행                                                                       |
| 8. 반부패 교육        | 관련 임직원을 대상으로 일반 및 맞춤형 반부패 교육 실시                                                                  |

[출처: U.S. Department of Justice, Agricultural Company to Pay Over \$10M to Resolve Foreign Bribery Case (2026.7)]

## 참고

[SCOULAR, FY25 Annual Sustainability Report](#)

[U.S. Department of Justice, Agricultural Company to Pay Over \\$10M to Resolve Foreign Bribery Case \(2026.7\)](#)

# 권익위 동향

## 권익위 활동

### 2030 청년세대가 바라본 우리 사회 공정성 조사

국민권익위원회는 2030 청년세대가 체감하는 우리 사회의 공정성 수준과 정책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9월 15일부터 30일까지 만 19~39세 청년 1,000명을 대상으로 인식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기존 대국민 부패인식도 조사에서 나아가 청년세대에 초점을 맞춰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공정성 수준과 전망, 불공정하다고 느끼는 이유, 교육기회·입시제도·채용·법 집행 등 분야별 공정성 수준을 심층적으로 조사한다. 아울러 공정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정책에 대한 의견도 수렴하며, 조사 결과는 우리 사회의 공정성 수준을 진단하고 청년세대가 체감할 수 있는 공정성 제고 정책을 발굴·추진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 국민권익위원회 2026년 9월 15일  
[https://www.aarc.go.kr/board.es?mid=a10402010000&bid=4A&act=view&list\\_no=118503](https://www.aarc.go.kr/board.es?mid=a10402010000&bid=4A&act=view&list_no=118503)

### 1,300억 원 규모 모듈러교실 입찰담합 적발

국민권익위원회는 전국 13개 지역의 초·중·고등학교 모듈러교실 계약을 조사해, 가족·친족 관계로 구성된 업체들의 입찰담합과 특혜 의혹을 적발했다. 해당 업체들은 2022년 7월부터 2026년 7월까지 총 99건, 약 1,300억 원 규모의 계약을 수주했으며, 일부 카탈로그 계약의 모듈당 가격은 총액입찰보다 최대 3배 이상 높게 형성됐다. 국민권익위는 사건을 공정거래위원회·경찰청·조달청·교육청 등에 이첩하고, 표준단가 적용, 외부전문가 평가, 직접생산 여부 점검, 실내공기질 검사 강화 등 계약 단계별 개선 방안을 권고했다.

- 국민권익위원회 2026년 9월 14일  
[https://www.aarc.go.kr/board.es?mid=a10402010000&bid=4A&act=view&list\\_no=118404](https://www.aarc.go.kr/board.es?mid=a10402010000&bid=4A&act=view&list_no=118404)

## 권익위 정책

### 예산 및 기금안 1,862억 원 편성…“공익신고 장려기금 신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 권익 보호와 청렴사회 실현을 위해 2027년도 예산 및 기금안으로 전년보다 745억 원 증가한 1,862억 원을 편성했다. 주요 사업에는 국민신문고 민원을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해결 방안을 제안하는 ‘AI 국민권익플랫폼’ 구축, 비긴급 상담번호의 110 통합, 집단·특이민원 대응체계 강화 등이 포함됐다. 특히 ‘공익신고 장려기금’을 신설해 부패·공익신고자 보상 예산을 49억 원에서 451억 원으로 확대하고, 미래세대 대상 청렴·권익교육도 강화할 계획이다.

- 국민권익위원회 2026년 9월 8일  
[https://www.aarc.go.kr/board.es?mid=a10402010000&bid=4A&act=view&list\\_no=118034](https://www.aarc.go.kr/board.es?mid=a10402010000&bid=4A&act=view&list_no=118034)

### 청탁금지법 시행 10주년 토론회 개최

국민권익위원회는 청탁금지법 시행 10주년을 맞아 그간의 성과를 돌아보고 향후 제도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기념 토론회를 개최한다.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는 2018년 4,386건에서 2025년 1,280건으로 70% 이상 감소해, 청렴문화와 공정한 직무수행 관행이 사회 전반에 정착하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됐다. 토론회에서는 지난 10년의 성과와 과제를 비롯해 외부강의 규정 개선, 과태료 부과권자 및 부과 범위 조정 등 현장 중심의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 국민권익위원회 2026년 9월 14일  
[https://www.aarc.go.kr/board.es?mid=a10402010000&bid=4A&act=view&list\\_no=118403](https://www.aarc.go.kr/board.es?mid=a10402010000&bid=4A&act=view&list_no=118403)

# 국내외 동향

## 반부패 정책

### 정부, 첫 반부패정책협의회 개최

정부는 8 월 21 일 제 1 차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열고 토착비리, 공공계약 비리, 보조금 부정수급 등 국가재정 편취, 전관유착을 주요 과제로 논의했다. 지방정부의 공공 이상거래 전수점검과 전자대금청구시스템 의무화, 지방자치단체·지방의회의 수의계약 실태조사와 이해충돌방지법 개정, 공공조달 입찰비리 점검 강화 등이 추진된다. 국고·지방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신고포상금과 제재부가금을 강화하고, 수출입실적·원산지 조작을 통한 재정·금융 편취행위에 대한 관계기관 공조도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전관유착 방지를 위한 입법과 재취업 관리 강화, AI를 활용한 부패행위 적발체계 구축 등 반부패 관리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 대한민국 청와대 브리핑 2026년 8월 21일  
<https://www.president.go.kr/briefings/BARoajsK>

### 미국 CFTC, 내부고발 포상금 지급기준 개정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는 내부고발자 포상금이 500 만 달러(약 69 억 4 천만원) 이하인 경우 원칙적으로 30%의 포상률을 적용하는 최종 규칙을 승인했다. 다만 실제 포상률은 관련 규정상 고려 요소에 대한 CFTC 의 심사를 거쳐 조정될 수 있다. 이번 개정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내부고발자 포상 규정을 모델로 마련됐으며, 양 기관의 제도를 조화시키고 포상금 심사의 효율성과 투명성,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CFTC 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내부고발자의 신고를 장려하고 위법행위 적발을 지원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최종 규칙은 연방관보 게재 후 30 일 뒤 시행된다.

- 미국 CFTC 홈페이지 2026년 9월 11일  
<https://www.cftc.gov/PressRoom/PressReleases/9297-26>

## ESG/개인정보보호

### 한국-OECD, 공공기관 국제정책포럼 개최·ESG-AI 활용 논의

재정경제부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프랑스 파리에서 제 4 회 공공기관 국제정책포럼을 개최하고, 공공기관의 지속가능경영 이행과 AI 도입, 공기업 지배구조 혁신 등을 논의했다. 28 개 국가·국제기구의 정책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2024 년 개정된 'OECD 공기업 지배구조 가이드라인'의 국가별 이행 방안과 사례를 공유했다. 한국은 공공기관의 ESG 경영 확산을 위한 가이드라인과 적용 사례, 공공목적 정립 및 경영평가인센티브 운영 사례 등을 소개했다. 재정경제부는 이번 논의와 각국 사례를 향후 공공기관 정책 수립에 활용하고 국제적인 정책 교류와 협력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연합뉴스 2026년 9월 16일  
<https://www.yna.co.kr/view/AKR20260916054200002?input=1195m>

### 개인정보 대규모 유출 시 매출액 최대 10% 과징금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일으킨 기업에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징벌적 과징금 제도가 9 월 11 일부터 시행됐다. 고의·중과실로 3 년 이내 위반을 반복하거나 1,000 만 명 이상의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발생시킨 기업,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유출 사고가 발생한 기업 등이 대상이다. 반면 사고 발생 전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충분한 투자를 한 경우 과징금 기준금액을 최대 40% 감경할 수 있으며, CEO 의 개인정보 보호 의지와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의 권한, 전문인력 확보 수준 등도 제재 수위를 결정하는 요소로 반영된다. 대규모 개인정보 처리 기업은 CPO 지정·변경·해제 시 이사회 의결을 거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해야 한다.

- 한경 BUSINESS 2026년 9월 11일  
<https://magazine.hankyung.com/business/article/202609118075b>

# 통관에서 제품이 멈춰있어요



## 2026 대한민국 ESG 친환경대전

탄소집약적인 산업·경제 구조를 혁신하기 위한 녹색 기술·제품·서비스 등을 솔루션 형태로 제시하는 비즈니스 및 네트워킹 전시회.

- 주최: 기후에너지환경부
- 일정: 2026년 10월 21일(수) ~ 10월 23일(금)
- 사전등록기간: 2026년 9월 2일(수) ~ 10월 20일(화)
- 장소: 코엑스 A홀(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513)
- 참고: <https://k-eco.or.kr/home/>

## 대한상공회의소, 제54회 상공의 날 포상 신청

기업경영의 모범을 보이고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한 국내외 상공인과 근로자에게 정부포상을 수여하는 행사.

- 주최·주관: 산업통상부·대한상공회의소
- 신청기간: 2026년 9월 9일(수) ~ 10월 19일(월)
- 시상식 일정: 2027년 3월 17일(수)
- 참고: <https://sople.me/edu-event-net/323134?type=conference>

## 독자 퀴즈

※퀴즈 정답자 중 5명을 추첨하여 소정의 경품을 드립니다.  
독자의견은 이메일/퀴즈 응모 폼의 의견란을 통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Q. 다음 중 책임 있는 공급망 관리를 위해 확인할 사항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제품의 가격
- ② 제품의 납기
- ③ 공급망 내 인권·환경 및 부패 위험
- ④ 제품의 디자인

응모하기 <https://quiz.assist.ac.kr>

2026년 10월 12일(월)까지

(1) '응모하기' 페이지에서 응답하시거나

(2) 국민권익위원회 민간협력담당관실([korea@assist.ac.kr](mailto:korea@assist.ac.kr)) 앞으로

의견과 성함, 연락처(휴대폰 번호)를 보내주세요.

\* 수집된 개인정보는 상품 발송 정보로만 활용되며, 추첨 이후 파기됩니다

### 기프트콘 당첨자 안내

김○선님, 박○비님, 김○원님, 윤○원님, 이○섭님

귀중한 의견에 감사드립니다!

## 질의 응답

### ★ 국민권익위에 문의하세요 ★

윤리경영 업무 중 궁금했던 제도·해석 사항이 있다면 독자 의견과 동일한 경로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취합 후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식 문의하여 개별적으로 답변을 드릴 예정입니다.

민원상담 신청부터 결과확인까지 온라인으로 한번에 끝내기

법령·제도·행정 등 민원상담은 ▶ 국민신문고 [www.epeople.go.kr](http://www.epeople.go.kr)

- ① 상담신청      국민신문고 ▶ 민원상담·안내
- ② 상담관지정    민원 내용에 따른 상담관 지정
- ③ 사실관계조사    관계 법령 검토 및 자료조사로 사실관계 확인
- ④ 결과확인      국민신문고 ▶ 민원상담 신청결과

부패·공익신고는 ▶ 청렴포털 [www.clean.go.kr](http://www.clean.go.kr)

- ① 부패·공익신고 상담 및 안내
- ② 부패·공익 침해 행위 신고
- ③ 신고자 보호 및 보상 신청
- ④ 신고 및 신청사건 결과조회